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13개 건설사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합동선포식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13개 건설사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합동선포식'을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13개 대형건설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개 건설사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합동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과 13개 대형건설사 대표 및 협력사 대표 등 200여명,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

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엠코, 태영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경제위기 후의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준비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건설업계가 그동안 도로, 주택, 공



▲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기업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가치가 될 것이며, 이번 협약체결은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 모범적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석대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형종합건설사와 협력업체간 상생협약 합동선포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각 주체인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상생과 함께 최종 목표인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항, 해양항만, 고속철도 및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인정받아 우리나라를 세계 건설 강국으로 올려놨다”고 치하하고 “이번 협약체결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 모범적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강석대 회장은 축사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약이행 우수업체에 대하여 별점감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개념 상생협력방안인 삼각공조프로그램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최근 건설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하도급업체도 물량부족으로 인한 저가 출혈 경쟁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형종합건설사와 협력업체간 상생협약 합동 선포식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오늘 선포식을 계기로 대·중소기업간에 상호 협력적 상생관계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석대 회장은 또 “건설사 상생협력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각 주체인 발주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상생과 함께 최종 목표인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다음 “발주자인 정부는 가격 위주의 입찰제도인 최저가낙찰 확대를 지양하고 기술 위주의 입찰제도로 개선하여 적정공사비를 보장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정밀시공과 품질향상이 소비자에 대한 경쟁력인만큼 가격위주의 경쟁이 아닌 기술과 품질 위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강석대 회장은 이어서 “4만5천여 기계설비와 전문건설업계는 기술능력 배양과 적극적인 품질향상으로 하자없는 우수한 시설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을 한 13개 대형건설업체는 5,000여개 협력사들에 대해 8,300억원의 자금지원은 물론 현금결제비율 상향, 지급기일 단축 등 결제조건 개선,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약속했다. 

중기중앙회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29일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3월 29일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하여 주최측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덕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전수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조용근 세무사회 회장, 한승호 이노비즈협회 회장 등 관련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직할시공제 조속 시행 확대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 및 현안 제기

이날 간담회에서 기계설비를 비롯한 중소기업에는 ▲ 직할시공제 조속 시행 확대 ▲ 직접시공 의무규제 폐지 ▲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조속 도입 ▲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재 직접구매 및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레미콘업체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경영애로 및 현안을 제기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정책역량 집중”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되었던 경기는 작년 한해 업계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조속한 대처로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밝히며 “금년에도 국토부는 SOC투자 확대,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감을 꾸준히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종환 장관은 또 “국토부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소업체도 발주자와 시공자의 격

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R&D 투자 확대를 통해 품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석대 회장 “직할시공제 조속시행 확대, 직접시공의 무규제 폐지, 건설노무제공자 제도 조속 도입”건의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9월 당정협의로 보금자리주택건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저소득층 및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직할시공제」 시행을 결정했다”고 언급한 다음 “직할시공제는 발주자가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발주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하도급이 아닌 직접계약으로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발주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직할시공 대상이 크게 축소(보금자리주택 건설호수의 5%, 3년간 한시적

시행)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작년에 발주될 직할시공 대상물량인 6,150호 조차도 3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주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으로 정한 직할시공사업이 무슨 이유로 한 건도 발주되지 않고 있는지 기계설비와 전문건설업계는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하고 “우리 중소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감안하시어 직할시공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또한 직할시공대상 사업이 확대될

시행)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작년에 발주될 직할시공 대상물량인 6,150호 조차도 3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주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으로 정한 직할시공사업이 무슨 이유로 한 건도 발주되지 않고 있는지 기계설비와 전문건설업계는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하고 “우리 중소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감안하시어 직할시공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했다. 또한 직할시공대상 사업이 확대될



▲ 강석대 회장이 “직할시공제 조속 시행 및 확대”를 건의하자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 직할시공제 조속 시행 및 확대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직할시공제가 주택호수의 5% 범위 내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시행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할시공제는 현행 3단계 도급구조(토지주택공사 → 종합건설사 → 전문건설사)를 2단계(토지주택공사 → 시공사)로 축소해 원가절감 및 분양가 인하 유도 가능 • 국토부 '09.9월 안양 관양지구 등 9지구 6,150호에 대해 직할시공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 그러나 당초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건설업계 이해관계로 직할시공제의 전면도입이 축소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직할시공제 대상 보금자리 주택 발주물량 조차도 '10.3월 현재 1건도 발주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해당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 사업의 시행지연에 대해 내부적 사정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음 	<p>직할시공제의 조속한 시행과 특히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직할시공제 확대</p>

중기중앙회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밖에 강석대 회장은 직접시공 의무규제 폐지, 건설노무 제공자제도 조속 도입도 건의했다.

강석대 회장의 건의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직할시

공제의 조속한 시행을 약속했다.

강석대 회장이 건의한 ▲직할시공제 조속 시행 및 확대 ▲직접시공 의무규제 폐지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조속 도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접시공 의무규제 폐지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3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의무화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시공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장광근 의원, 2009.12.18) * 50억원 미만 50%, 100억원 미만 30%, 300억원 미만 20% 로 확대 • 건설법 상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체는 직접시공 기능이 없어 위장직영, 불법하도급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하도급에 따른 전문건설업계의 시장축소·존립기반 상실 • 시공방범을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완화,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조치임 	<p>직접시공 의무화 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폐지 건의</p>

▼ 건설노무제공자제도 조속 도입 건의

현황 및 문제점	건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수대교 등 대형 붕괴사고 이후 책임시공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96년말 '시공참여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참여정부 시 등 제도가 폐지('08.1)되어 건설업체는 모든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토록 의무화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제도 폐지로 하도급현장의 시공능률 저하, 공사원가 상승, 전문업자 범법자 양산 및 숙련근로자의 복지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문·설비건설업체들의 경영애로 가중 • 건설근로자 직접고용 의무에 따른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무제공자제도'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입법 발의됨(백성운 의원, 한나라당, '09.12.18) • 동 건설노무제공자제도는 건설현장의 시공능률 향상, 건설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공사원가 상승 해소, 품질향상 및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전체 전문공사중 0.02% 수준), 근로자 복지 저하 및 다단계 하도급 등을 방지하도록 제도가 보완되어 노동계의 우려 해소 가능 * 근로자복지를 위해 4대 사회보험을 전문·설비건설업자 책임으로 하고, 다단계 하도급 방지를 위해 전문·설비건설업자와 노무제공자의 재하도급을 금지시키고 일부 다단계 공사인 건설기계임대 등을 대상에서 제외 • 숙련·검증된 근로자 사용, 생산성 향상 등으로 부실공사가 방지되어 SOC, 주택, 도로 등 국가자산의 고품질화에 기여가 가능하며, 영국·호주·일본 등 선진국도 불합리한 직접고용 의무 규제를 폐지하고 고용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임 	<p>'건설노무제공자제도' 도입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 건의</p>